국별 리포트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6.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8

Ⅴ. 종합의견 22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Ⅰ. 일반개황

면 적	442천 km^2	G D P	1,977억 달러 (2017년)
인 구	38.9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5,088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공화제(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Iraqi Dinar (IQD)
대 외 정 책	친미, 친이란 노선	환 율(달러당)	1,184 (2017년 평균)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였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음.

□ 전 국민의 90% 이상인 이슬람교도가 시아파(65%)와 수니파(35%)로 나뉘어 종파 간 분쟁과 부족 간 갈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낮음. 한편,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북부 3개 주(州)를 관할하고 있음.

□ 두 차례의 전쟁과 UN 경제제재 등의 여파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발달이 저조하며,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일원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제명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IS(이슬람국가)의 침공에 이어 여타 수니파 극단주의 군사조직의 테러 공격이 계속되는 등 종파 갈등에 기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제 성 장 률	0.7	4.8	11.0	−0.8	3.1
재 정 수 지 / G D P	−5.3	−12.3	−13.9	−2.3	0.3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2.2	1.4	0.4	0.1	2.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 유가상승 및 산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Oil Market Report에 의하면,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2013년 308만 배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42만 배럴, 2017년 447만 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감산 합의 당시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 상한선은 435.1만 배럴로 정해졌으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역시 상한선을 다소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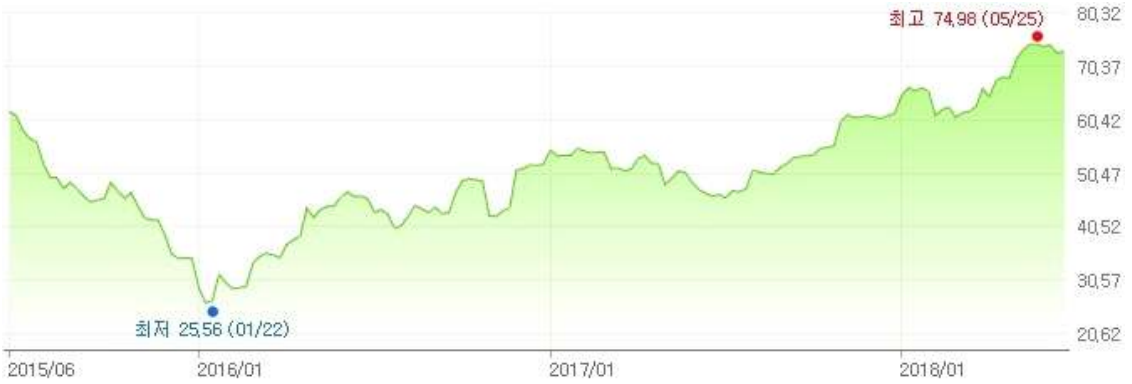
- 원유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원유수출량도 증가세를 지속하여, 이라크 석유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일평균 원유수출량은 4월 334만 배럴에서 5월 349만 배럴로 증가하였음.[1)]

○ 한편, 2016년 11월 OPEC 회원국 및 12월 非회원 산유국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2013년 102.9달러에서 2016년 35.6달러까지 추락했던 이라크의 원유수출 평균가격(배럴당)도 2018년 5월에는 69.9달러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2)]

1) 자료: Iraq Business News (www.iraq-businessnews.com/2018/06/04/oil-exports-rise-in-may, 조회일자: 2018.6.19).
2) 1)과 동일.

-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두바이유 배럴당 선물거래가격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6년 1월 22일(이하 현지시각) 25.56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다 감산 합의를 기점으로 50달러를 돌파하여 금년 5월 25일 74.9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3~74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최근 3년 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두바이유 선물거래가격 추이



자료: NYMEX (조회일자: 2018.6.20.)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8년 5월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라크 경제가 2017년에 -0.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이는 산유량 증가 등에 힘입어 11.0%의 성장을 기록한 2016년은 물론, 4.8%의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서도 크게 악화된 수준임.

○ 감산 결정 당시의 기대치(배럴당 60달러 내외)에 미치지 못하는 국제유가 상승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의 내전 후유증, 여타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국내총투자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위축되는 상황이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공공 부문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민간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긴축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총투자에서 공공투자의 비중이 10% 내외로 하락하고 있는 점, 투자 위축이 주로 비석유 부문에 집중되어 비석유 부문의 성장 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점도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이 되었음.

○ 다만, 2018년에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파기 및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량 감소 및 그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전망, IS 격퇴 후 북부 지역에서의 농업생산량 증가 전망 등에 힘입어 3%대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IS와의 전쟁 종료에 따른 전쟁비용 지출 해소로 2018년 흑자 전환 기대

○ 산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과 전쟁비용 지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5년 -12.3%로 전년(-5.4%)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3.9%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IMF 대기성차관 도입 조건으로 긴축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산유국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원유수출량도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3%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IS와의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전쟁비용 지출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가 GDP의 0.3% 내외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보조금 축소·폐지, 세수기반 확대, 공공부문의 임금 지출 조정 등 과감한 재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 쿠르드자치정부(KRG)의 통제하에 있던 키르쿠크(Kirkuk) 유전의 관할권이 이라크 중앙정부로 이관된 것도 이라크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8년에는 IS와의 전쟁 종료 후 각종 재건사업 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2018년도 예산안은 배럴당 원유가격 46달러, 일일 원유수출량 390만 배럴을 가정하고 정부 수입을 775억 달러[3]로 책정하여 총액 885억 달러로 편성됨.[4]

- 이는 전년(851.7억 달러) 대비 약 4% 증가한 규모이나, 전체 예산의 약 12%에 달하는 106억 달러의 정부 적자[5]를 예상한 편성임.

3) 석유 부문으로부터의 수입 84%, 비석유 부문으로부터의 수입 16%를 상정함.
4) 자료: Middle East Eye (www.middleeasteye.net/news/iraq-adopts-2018-budget-slashing-allocations-kurds-1116415756, 조회일자: 2018.6.19).
5) 예산 적자분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국채 발행, 정부지출 축소, 신규 세금 징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한편, 재정자금에 의한 각종 투자규모는 208억 달러로 책정하였음.

- 반면 IMF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라크의 2018년 중 재정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배럴당 원유가격도 예산안 기준(46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가 기대됨.

□ **원자재·식료품 국제가격 회복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상승 전망**

○ 석유산업 이외의 산업 부문 발달이 부진하여 대부분의 생필품 및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수입품의 국제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16~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1% 미만 수준에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원자재·식료품의 국제가격 상승 추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각종 보조금 축소·폐지 등에 따라 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석유 부문의 발전이 미흡**

○ 석유산업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에 IS 등의 테러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비석유 부문의 활성화보다 정부 재정수입의 즉각적인 원천이 되어주는 석유 부문에 더욱 주력하여, 비석유 부문의 발전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

○ 이라크 정부는 역내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국가경제 발전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의 지속으로 인해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

○ 이라크는 2017년 말 원유 1,488억 배럴(세계 5위, 중동 3위), 천연가스 3.5조 ㎥(세계 12위, 중동 5위)의 확인매장량[6]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

○ 이외에 인산염, 황 등의 광물자원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남부 및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산유량 증가 추세

○ IS와의 내전 및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부 지역과 KRG(쿠르드자치정부)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원유 증산이 계속되어 왔음.

※ 일일평균 원유생산량(만 배럴)[7] : 308('13) → 333('14) → 400('15) → 442('16) → 447('17) → 445('18.1분기)

다. 정책성과

□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소비세 도입 추진

○ 이라크 정부는 3월 3일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모든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하여 5%의 소비세를 부과[8]하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함께 발표하였음.[9]

○ 아울러 전년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 임금 축소(2017년 35.8조 디나르 → 2018년 34.8조 디나르), 연금 및 보조금 감축(2017년 15.7조 디나르 → 2018년 15.2조 디나르)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full report 2018.
7) IEA Oil Market Report, May 2018.
8) 배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이발소/미용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됨.
9) 다만, 소비세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실제로 소비세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함.
10) 자료: Al-Bayan Center for Planning and Studies (www.bayancenter.org/en/2018/03/1461, 조회일자: 2018.6.19).

□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

○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이라크의 기업경영 여건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68위로 전년(190개국 중 160위)보다 8계단 하락하여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부문별로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154위), 계약분쟁 해결(Resolving insolvency: 168위), 무역통관(Trading across borders: 179위) 및 자금조달(Getting credit: 186위) 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 지속,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각종 장애요인들로 인해 제도 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성과 부진

○ 이라크 정부와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이라크의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종파 및 부족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구조의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음.

- IS 격퇴전이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데는 뇌물을 제공하고 병영을 이탈하는 등 군대 내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로 초래된 이라크 정부군의 기강 해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그러나 정치인 수당 축소, 유령 노동자 임금 축소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이라크 정부의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성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 최신호(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민간 부문의 육성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

○ 이라크는 대부분의 산유국들처럼 에너지 부문 국영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며(GDP의 약 40%를 점유), 두 차례의 전쟁과 IS의 침공 및 테러 공격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민간 부문의 발전이 취약함.

○ 외국인투자 유치가 대부분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에 집중되고, 치안 불안과 열악한 사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민간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민간 부문의 육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상수지	24,428	4,121	3,843	14,178	25,793
경상수지/GDP	10.4	2.3	2.2	7.2	11.6
외환보유액	61,911	50,071	41,169	44,712	46,486
총외채잔액	58,110	66,130	67,529	73,707	82,998
총외채잔액/GDP	24.8	36.8	39.3	37.3	37.2
D.S.R.	2.4	3.9	19.1	6.4	4.4

자료: IMF BOPS, EIU Country Data, OECD CRAM.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수출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

○ 경상수지는 원유 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감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14년 10.4%에서 2015년 2.3%, 2016년 2.2%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2017년에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원유수출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원유수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에 힘입어 동 비중이 7.2%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 일방적 파기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량 감소 전망 등으로 원유 수출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동 비중이 11%를 넘어설 전망임.

○ 외환보유액은 저유가 지속으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함에 따라 2014~16년의 3년 간 감소를 거듭하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1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원유수출 가격이 다소 회복되고 원유수출량도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과 국채 발행 등으로 GDP 대비 30%대 후반을 지속할 전망

○ 총외채잔액은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2015년 말 전년대비 13.8% 증가하며 GDP 대비 비중도 36.8%로 상승(전년도 24.8%)하였음. 2016년에도 대외차입이 계속되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3%로 다소 상승하였음.

○ 2017년에는 76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외채잔액이 증가하였음에도 경상GDP(미 달러 환산) 증가로 동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한 3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전망됨.

- 이라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국채(미국 정부가 원리금 지급 100% 보증)를 금리 2.149%에 발행한 데 이어 8월 2일 5년 만기 국채 발행을 모집하였는데, 당초 모집액의 6.6배인 66억 달러를 당초 목표금리(7.0%)보다 낮은 6.75%의 금리로 발행하였음.[11]

- 이라크의 국가신용등급이 여전히 투자부적격(junk) 등급 중에서도 중하위권 수준[12]임에도, 국제적인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이라크는 IMF로부터 2013년 2월 37억 달러, 2015년 7월 1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16년 5월에도 재정수지 적자 감축을 조건으로 IMF와 향후 3년 간 53.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SBA) 지원 약정을 체결하는 등 당분간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차관에 대외차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쟁 등으로 발생한 파괴의 복원을 위한 재건에 향후 10년 간 882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중 당장 시급한 인프라 재건 등에 2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이의 충당을 위해서는 이라크 정부의 재정자금 외에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불가피함.[13]

11) 이라크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국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국제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여 무산되었음. 이어 금년 1월 18일 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이자율 2.149%로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100% 보증하는 조건이었음.

12) S&P와 Fitch는 각각 B- 등급, Moody's는 Caa1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13) 자료: Middle East Eye (www.middleeasteye.net/news/iraqs-reconstruction-will-cost-882-billion-planning-ministry-says-2009456982, 조회일자: 2018.6.19).

○ D.S.R은 외채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2015년 말 3.9%에서 2016년 말 19.1%로 일시적인 급등을 보였으나, 2017년 말에는 6.4%로 다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말에는 4%대 초·중반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2018년 5월 총선 결과 강경 시아파 성직자가 이끄는 Saairun Alliance(행군자동맹)가 최대 의석 획득

○ 2018년 5월 12일 치러진 이라크 총선 결과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인 Muqtada al-Sadr(1973년생)[14]가 이끄는 정파인 Saairun Alliance(행군자동맹)가 총 328석 중 54석을 차지하여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과반수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음.

○ 현역 국회의원 Hadi al-Amiri가 이끄는 Fatah Alliance(정복동맹)는 47석을 획득하였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는 Haider al-Abadi 총리[15]가 이끄는 Victory Alliance(승리동맹)는 42석 획득에 그쳤음.

- al-Amiri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아파 민병대 바드르 여단의 총사령관 출신으로, 이라크 내각의 교통장관을 역임(2010.12월~2014.9월)하였음.

- Saairun Alliance, Fatah Alliance, Victory Alliance 등 이라크 내의 정파들은 각각 복수의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연합체임.

○ 한편, 이라크 총리를 역임(2006.5월~2014.9월)한 바 있는 Nouri al-Maliki 부통령이 이끄는 State of Law Coalition(법치국가연합)은 기존의 92석에서 무려 67석이나 줄어든 25석 획득으로 참패하였음.

14) al-Sadr의 조부인 Ismael al-Sadr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의 저항운동을 이끌었으며, 부친인 시아파 고위 성직자 Ayatollah Mohammad Sadeq al-Sadr도 저항운동을 이어가다 사담 후세인 집권 시기에 암살당하여, al-Sadr 가문은 이라크 시아파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하나임.

15) al-Abadi 총리는 대표적인 친미 지도자로 미국과 공조하여 IS 격퇴전을 수행해온 동시에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종파 및 부족 간의 분열 해소, 산적한 정치·경제적 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능력이 결여된 인물로 평가되었음. 그럼에도 그를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이라크의 정치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이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왔음.

□ Al-Sadr는 시아파임에도 미국은 물론 이란의 개입도 거부하는 강경 민족주의자로 자주 노선을 견지

○ 시아파 중 "12 이맘파"(이란의 국교)의 울라마(율법학자)인 al-Sadr는 2003년 6월 시아파 민병대인 Jaish al-Mahdi를 조직하여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수니파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음.

- Jaish al-Mahdi는 2008년 해체되었으나, 2014년 IS의 이라크 침공이 발생하자 Saraya al-Salam이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되어 IS 격퇴전에 참여하였음.

○ al-Sadr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반대하는 무력 투쟁을 이끄는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이라크 내정에 대한 간섭에도 반대해 왔으며, 아울러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이 시아파 정부가 들어선 이라크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강경 민족주의자로 알려짐.

○ 즉, al-Sadr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이슬람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TIME지는 그가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배경을 지녔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라크의 도널드 트럼프"라 묘사하였음.

□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 발생,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투표함 일부 소실

○ 5월 총선 직후 금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서도 그대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를 강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에 이라크 의회는 6월 6일 재외국민 투표와 IS 격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 난민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전국의 투표함을 수개표 방식으로 재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음.

○ 그러나 6월 10일 수도 바그다드의 투표함 보관소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재개표를 앞둔 투표함을 보관 중인 4개의 창고 중 1개가 소실되었음.

- 이에 대해 총선에서 제1정파로 등극한 Saairun Alliance는 주류 정치권이 패배를 뒤집기 위해 총선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방화를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Saairun Alliance와 Fatah Alliance 간의 연정 선언

○ 한편, al-Sadr는 6월 12일 자신이 이끄는 Saairun Alliance와 금번 총선에서 제2정파로 등장한 Fatah Alliance 간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였음.

- 쿠르드자치지역의 최대 정파인 쿠르드민주당(KDP, 25석)과 쿠르드애국동맹(PUK, 18석)이 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중도 민족주의 계열 정파인 al-Wataniya(전국동맹, 21석)와 National Wisdom Movement (국가지혜운동, 19석)도 연정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 이어 6월 23일 al-Sadr는 Haider al-Abadi 총리의 Victory Alliance와도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Saairun Alliance는 외세를 배격하는 입장이고, Fatah Alliance는 親이란·反사우디 성향이며, Victory Alliance는 미국·이란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어 연정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연정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정파들이 대체로 외세 개입을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라크-미국 관계는 물론 이라크-이란 관계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분리 독립 요구는 새로운 정치불안 요인

○ 이라크의 최대 소수민족(약 5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으로 오랫동안 독립 투쟁을 벌여온 쿠르드족[16]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2006년 1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자치정부(KRG)를 수립하여 아르빌, 다후크, 술라이마니야 3개 주를 자치지역으로 관할하고 있음.

- 자치지역 내의 유전 개발 및 원유 수출 관련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자주 갈등을 빚어온 KRG는 최근 IS와의 전투 등의 혼란을 틈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음.

16) 쿠르드족은 터키 남동부(45%), 이란 북서부(24%), 이라크 북부(18%) 및 시리아 북부(6%)에 걸쳐 분포해 있음. 총 인구는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약 3,000만 명으로 추정되어,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전 세계의 민족들 중 최대 규모임.

○ KRG는 2017년 9월 5일, 관할지역인 3개 주에 키르쿠크 주와 니네베 주의 쿠르드계 주민들까지 포함시켜 쿠르드 민족 국가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9월 25일에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내외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음.

- 동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협상력을 증대시켜 보다 많은 자치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완전 독립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분석되었음.

- IS의 패퇴가 계속됨에 따라 그간 IS 격퇴전에서 자체 군사조직 페슈메르가(Peshmerga)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KRG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주민투표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음.

○ 이에 이라크 의회는 9월 12일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al-Abadi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4일에는 투표 참여를 밝힌 Najmiddin Karim 키르쿠크 주 지사의 해임안을 가결하는 등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음.

○ 이라크 대법원은 9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투표를 연기할 것을 KRG에 명령한다고 밝혔음. 이후 10월 16일 이라크 정부군이 KRG의 관할 하에 있던 키르쿠크 유전지대와 그 일대를 장악하여 통제권을 확보하였음.

○ KRG는 이처럼 이라크 중앙정부의 강경한 군사적 압박에 직면하자, 10월 24일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한다고 공표하여 결국 이라크 중앙정부에 굴복하였음.

○ 이라크 대법원은 11월 6일 KRG 관할지역의 분리를 불허한다고 판결한데 이어 11월 20일 주민투표가 위헌이며,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결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KRG의 독립 움직임이 무산되었음.

○ 분리 독립 투표의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중앙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려던 KRG는 이처럼 기존 자치권과 자치지역마저 축소되면서 내분에 휩싸였고, 결국 12년 동안 장기집권한 Masoud Barzani 자치정부 수반이 주민투표를 추진한 책임을 지고 11월 1일 사퇴하였음.[17)]

17) Barzani 수반의 사퇴 후 KRG의 수반은 현재까지 공석이며, 수반의 권한은 자치내각과 법원, 의회에 분산된 상태임.

○ 역시 쿠르드족이 분포한 인접국들인 터키[18]와 이란도 KRG의 주민투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음. 아울러 미국, EU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맹 역시 KRG의 분리 독립 요구는 대테러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투표의 연기를 촉구하였음.

○ KRG가 분리 독립을 선포할 경우 터키, 이란, 시리아 등 인접국들의 쿠르드계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 거주 중인 국가 내에서 역시 분리 독립을 선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쿠르드족 국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해당국 정부들은 이러한 분리 독립 움직임을 자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한편, 이라크 정부에게 KRG의 독립 추진을 제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됨.

○ IS 격퇴를 위해 KRG와 협력해온 이라크 정부는 KRG가 독립을 재차 추진할 경우 새로운 내전에 휘말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RG에 대한 터키, 이란 등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역내 전쟁 발발의 가능성마저 떠안는 등 역내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KRG의 독립 추진을 저지코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KRG가 분리 독립을 재차 강행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분열이 더욱 심해져 궁극적으로 이라크가 각각 시아파 국가, 수니파 국가 및 쿠르드족 국가로 3분열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KRG의 주민투표 좌절 이후 이라크 정부와 KRG 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이라크 정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KRG에 대한 예산 할당 비중을 예산총액의 12.6%로 전년(총액의 17%)보다 하향조정하였음.

- KRG 대표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3월 3일 의회에서 실시된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하였음.[19]

18) 특히 자국 내 쿠르드족 독립운동 조직들을 모두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강경 탄압 중인 터키 정부는 9월 14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KRG가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19) 자료: Middle East Eye (www.middleeasteye.net/news/iraq-adopts-2018-budget-slashing-allocations-kurds-1116415756, 조회일자: 2018.6.19).

2. 사회 안정

□ 2017년 12월, IS와의 3년 이상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공식 선언

○ 2014년 이라크를 기습 침공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이슬람국가)와 이라크 정부군 및 연합군 간의 전투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3년 이상 계속되었음.

- IS는 2014년 1월 이라크 북서부 안바르 주(州)의 팔루자를 기습 점령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안바르 주를 점령한 데 이어 6월 초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의 모술을 점령하였음.

- 이후 IS는 2015년 5월 중부의 라마디를 점령하여 이라크 영토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였으며, 점령지 내에서 파괴, 약탈, 양민 학살 등을 자행하였음.

○ 그러나 2015년 12월 쿠르드자치정부 군사조직 페쉬메르가(Peshmerga)가 미군의 지원 하에 모술 서부 신자르 지역을 탈환하고, 이라크 정부군이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라마디를 탈환하였음.

○ 이후 이라크 정부군은 2016년 중반부터 모술 탈환을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으나, 군 내부의 종파갈등과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장기전을 펼친 끝에 7월 10일 모술 탈환에 이어 8월 31일 IS의 북부 거점인 탈아파르와 니네베 주(州)를 탈환하였음.

○ 이라크 정부군은 계속해서 안바르 주 일부, 중북부의 하위자 등 IS의 잔여 점령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12월 9일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는 잔여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IS를 완전히 격퇴했다고 공식 선언하였음.

□ IS 잔당 및 여타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공격으로 정치·사회 불안 지속

○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IS를 이라크 영토 내에서 완전히 격퇴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패퇴한 IS 잔당이 각지에 흩어져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완전한 안정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 3,000여명 규모로 추정되는 IS 잔당이 점조직 형태를 유지하며 여전히 이라크 각지에서 총기와 폭탄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

○ 아울러 시아파 중심의 현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자행된 각종 반인륜 범죄로 인해 IS 점령에서 해방된 지역의 수니파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IS가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인 관계로,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IS 점령지역을 탈환할 때마다 그 곳의 수니파 주민들을 전부 IS 협력자로 간주하여 반인륜적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종파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음.

○ IS를 추종하거나 IS에 동조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도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등 테러 공격을 계속하여 이라크의 정치·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라크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주로 수니파)은 단순한 테러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사회의 뿌리 깊은 종파 간, 부족 간 갈등을 세력 확장에 악용하여 이라크의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3. 국제관계

□ IS 격퇴전을 위해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

○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IS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11월 2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S 격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反IS 연합전선이 가시화되어 이라크의 IS 격퇴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이라크와 서방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한층 강화되었음.

○ 다만, 미국은 걸프 전쟁 이후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여 이라크 문제에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따라서 미국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도 이라크 정부군의 훈련 및 전술 고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아파 집권 후 계속된 이란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갈등 요인으로 잠재

○ 인구의 다수(약 65%)를 차지하면서도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 치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시아파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의 정권을 장악하고,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이란은 이라크와 레바논(시아파가 다수), 시리아(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정권 장악), 예멘(시아파가 다수)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여 수니파의 맹주국이자 역내 최대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코자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이라크-이란 간의 밀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은 물론,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의 가장 큰 후원세력이자 이란과 적대관계인 미국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들 국가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 과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훼손된 이라크와 걸프 왕정 국가들 간의 관계는 IS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이라크-이란 간의 밀착관계 발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다만, 금번 총선 결과 의회 내 제1정파로 등극한 Saairun Alliance의 지도자 Muqtada al-Sadr는 미국은 물론 이란에 대해서도 이라크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터키와는 IS 격퇴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쿠르드족 문제로 긴장관계

○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니파 국가인 터키와의 관계는 긴장되었으나, IS의 침공을 계기로 IS 격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일단 협력해 왔음.

○ 터키군은 2015년 말부터 이라크 정부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모술 북동부의 바시카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페쉬메르가와 反IS 민병대 조직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담당하였음.

○ 터키군은 자국의 쿠르드족 반정부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이라크 영토 내 유입을 소탕한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포격하였고, 2016년 10월 중순 모술 탈환 작전에서는 수니파 주민 보호를 핑계로 개입하여 이라크 정부와 마찰을 빚었음.

- 이에 2017년 1월 이라크 의회가 터키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바 있음.

○ 현재 터키는 KRG 관할 3개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자국 내 쿠르드족의 봉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개입코자 이라크 내에 계속 자국 군대의 주둔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터키군은 6월 5일 이라크 북부의 PKK 시설물 16곳을 공습으로 파괴하였으며, 다음날인 6월 6일 터키 내무장관은 터키 육군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 내부 약 27㎞까지 전진하여 전열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여 지상군에 의한 PKK 토벌작전의 개시를 예고하였음.

○ 이처럼 터키가 이라크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중에 무단으로 이라크 영토를 침입하여 PKK 토벌을 위한 군사작전을 추진함에 따라 영토주권 침해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등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이라크는 파리클럽의 330억 달러 채무탕감(2004년 11월 합의)을 필두로 러시아 120억 달러(2008년), UAE 70억 달러(2008년), 중국 68억 달러(2010년) 등의 대규모 채무탕감이 성사되었음.

- 이라크는 현재까지 파리클럽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무탕감을 받은 국가들 중의 하나임.

- 이라크의 채무탕감에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이라크 전쟁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대출금 연체 중

○ OECD에 의하면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이라크에 대한 여신 56.9억 달러 중 76.2%에 해당하는 43.3억 달러가 연체 상태이며, 이중 42.4억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연체발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요국 ECA들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관측됨. 다만,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 3사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18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는 Caa1 등급, Fitch는 B- 등급을 각각 부여하여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junk)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OECD 등급 환산시 7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가장 최근(2017.8월) 이라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Moody's는 국가경제가 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만성적인 부정부패로 거버넌스 지표와 투명성 지표가 매우 낮으며, IS 잔당을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 지속으로 정치·안보 위험이 여전히 높은 점을 들어 Caa1 등급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등급 (2018.1)	7등급 (2017.1)
Moody's	Caa1 (2017.8)	-
Fitch	B- (2017.3)	B- (2016.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공통된 입장 유지

○ 이라크 정부가 IS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IS 잔당을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의 테러 공격 지속, 총선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싼 잡음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주요국 ECA(수출신용기관)들은 이라크 관련 거래에 대한 지원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음.

○ 미국 US EXIM은 이라크에 대해 공공 부문의 경우 7년 이하 중·단기 거래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 부문은 2015년 11월부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2015~17년) 간 US EXIM의 對이라크 지원은 단기수출보험 및 운전자본거래에 국한되고 있으며, 규모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2017년 말 기준 US EXIM의 이라크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캐나다 EDC는 이라크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수준'(highly restricted basis)에서 금융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최근 5년 내 OECD에 보고된 이라크 앞 여신지원 내역은 2017년 말 기준 6개 캐나다 기업에 대한 소규모 수출보험 제공(잔액기준 340천 캐나다달러)이 전부임.

○ 프랑스 Bpifrance는 이라크에 대해 '조건부 위험인수'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모든 종류의 수입자에 대해 인수 가능하나, 여신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프랑스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례별로 이라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보증도 요구할 수 있음.

○ 독일 HERMES는 이라크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건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원됨. 또한, 지원대상도 외국의 하도급 기업으로 한정됨.

○ 일본의 경우 JBIC은 이라크 관련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NEXI는 2년 이하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 중단, 2년 이상 상품의 경우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임.

- 현재 JBIC과 NEXI의 이라크 지원실적은 2017년 3월 두 기관의 협조융자로 이라크 정부 앞 변전설비 구입자금 대출(173억 엔 + US$322백만)을 제공한 것이 유일함.

※ JBIC이 103억 엔 + US$193백만, NEXI가 70억 엔 + US$129백만 지원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9년 7월 9일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 후 1980. 10. 10 단교)

□ **주요 협정** :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1983), 항공운수협정(1985), 문화협정(1985)

□ **교역규모**

○ 2017년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78.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14.6억 달러, 수입은 원유를 중심으로 6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428	1,440	1,462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 입	6,266	5,036	6,371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투자실적은 2017년 말(누계기준) 신규법인 수 총 16건, 투자금액 3억 6,95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의 투자실적은 2015년 2,355만 달러(신규법인 2개), 2016년 879만 달러(신규법인 없음), 2017년 615만 달러(신규법인 없음)로 감소 추세임. 투자부문별로는 광업이 98.9%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공사대금 미수령

○ 최근 수년 간 신도시 건설 등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이라크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자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지연하였음.

○ 공사대금 미수령에 더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 증가에 따른 치안불안 가중의 영향으로 해당 프로젝트들의 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Ⅴ. 종합 의견

□ 이라크는 2017년 말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임.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좌우됨.

□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 IS 등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치안불안의 와중에서 투자가 석유 부문에 더욱 집중되어 비석유 부문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임.

□ 감산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국제유가 상승폭, IS와의 내전 후유증, 여타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 증가로 국내총투자와 민간 소비가 동반 위축되어, 2017년에는 -0.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긴축 재정정책 추진과 원유 생산·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IS와의 전쟁에 따른 전비 및 복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2017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외채잔액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과 국채 발행 등으로 GDP 대비 30%대 후반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 정부는 2017년 12월 IS의 완전 격퇴를 선언하였으나, IS 잔당 및 이들을 추종하는 여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이라크 내 종파·부족 간 갈등관계를 악용하여 테러 공격을 지속하여 사회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추진한 바 있는 쿠르드자치정부가 차후에 재차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인접국들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동조할 경우, 새로운 내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들이 개입하는 역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상존하여 새로운 불안요소로 대두됨.

□ 이처럼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주요국 ECA(수출신용기관)들은 이라크 정부가 IS의 완전 격퇴를 선언하였음에도 이라크 관련 거래에 대한 지원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oki1122@koreaexim.go.kr